



희망리포트

2016-07

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

- 새로운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은경 · 황현숙



희망리포트

2016-07

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

- 새로운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은경 · 황현숙

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

- 새로운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이은경 (사회의제팀 연구위원 | ekleee@makehope.org)

공동연구 황현숙 (사회의제팀 연구원 | sook@makehope.org)

목차

연구요약	9
Ⅰ. 서론	18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Ⅱ. 문헌분석: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24
1. 이주민 인구 구성 및 현황	
2. 다문화정책 현황과 점검	
Ⅲ.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38
1. 비전과 전략의 부재	
2.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3. 시민인식	
4. 현장의 요구들	
Ⅳ. 새로운 시민/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56
1. 변화하는 지형들	
2. 지역과 다문화정책	
3. 참여와 관계맺기	
4.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V. 결론 및 제언	72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82

표 목차

[표 I-1]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인터뷰 참가자	23
[표 II-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9
[표 II-2]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적용 법령	32
[표 II-3] 이민자 유형별 정책 관련 원칙	34
[표 III-1] 정당 간 외국인 및 이민정책 핵심내용 비교	45
[표 III-2] 다문화 관련 지표의 국제 비교	50

그림 목차

[그림 II-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27
[그림 II-2]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7
[그림 II-3]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30
[그림 II-4]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만 18세 이하)	31
[그림 II-5] 중앙정부의 이민자 관련 정책 업무 현황	35
[그림 III-1]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 지수 비교	49



연구요약

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 한국사회 핵심역체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 정책 실행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아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인터뷰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현황,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주민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약 190만 명으로, 2014년 대비 5.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3.69%에 이른다.
-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중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이주노동자로, 2015년 말 법무부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통계기준으로 62만5천 명이고, 그중 56만 명은 단순기능인력이다. 여기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28만5천여 명이 포함된 것이다.
-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귀화자를 포함 30만5천

명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2015년 7월 기준 82만 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력의 관리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1991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었다.
- 1999년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 등 여러 특례를 규정하였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강제이주한 재중동포, 재러동포 등도 외국동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재외동포 대상 취업관리제(2002년), 방문취업 자격 신설(2007년)도 이루어졌다.
-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이다.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2007년 이민자와 국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와 법률 제정도 이루어졌다.
- 지난 10여 년은 여러 법률과 정책 수립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다. 특히 소극적인 차원의 통제와 관리

를 벗어나 적극적인 노동인력과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존의 방향 모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인프라를 확장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흡하며, 가족결합권이 없는 이주노동자가정은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간 중복지원 및 이벤트성 지원 정책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 비전과 전략의 부재: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 정책의제에서 다문화정책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 국민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이 적극적인 비전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자민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관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렇

지만 최근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 점을 수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이 나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다문화정책과 관련 예산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기 이전에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관리와 통제 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고, 정치권 또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입장 차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 시민인식: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의 개선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인식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식개선 요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장 활동가들의 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수준이나 다문화수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이었고 젊은 연령대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고, 다문화 교육이나 자원봉사 등 관련 활동 참여경험이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장의 요구: 다문화정책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의 역량강화 지원, 이를 위한 상담과 성장의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등 다문화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먼저, 이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실행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착 기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정착 이후에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정책과 사업의 내용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역량강화와 실효성 측정은 상담 지원과도 연결된다. 이주 이후 삶의 문제 해결 및 갈등의 극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의 다문화가족자녀정책은 학령기 이전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교육과 진학, 취업, 그리고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자녀훈육법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 한국 교육환경과의 거리감 및 정보력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 변화하는 지형들: 지금까지 이주민들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개개의 시민, 지역주민, 이웃으로서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숙하는 것과 이주민 문화공동체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정착 이후의 생애주기 변화, 이주민들 내 세대 변화, 본국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잠재적 시민주체로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대상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2015) 결과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가정에서 충분한 심리, 정서 및 학습을 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반영된다.
- 지역과 다문화정책: 지역은 노동, 거주, 생활의 장으로써 직접적인 다문화공간이 된다.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민간단체들과 갈등 또는 협업하거나 파트너가 되는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크다.
- 참여와 관계맺기: 지원과 복지사업 중심의 다문화사업은 '참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관계맺기를 통한 성장,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등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이주민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한국사

회에서 관계와 참여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식교육과 생활 ·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각 사회기관에 걸쳐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을 갖추고, 다양성, 인권, 양성평등의 내용이 반영된 지침과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 결론: 현 정부 들어서 다문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과거 쏟아져 나오던 다문화정책에 비해 현재는 관심 갖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들도 중단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라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저성장 · 불평등사회가 되어가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된 다문화와 이주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주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쟁하고 합의해야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또한 다문화 논의가 국가의제 정책담론의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이뤄야 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문화 2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쯤에는 완만해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 제언: 시민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우리 사회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앤두(Think&Do)탱크’ 희망제작소는 다문화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문화인식교육의 다양한

틀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우월의식이나 차별,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발견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다문화 시민의식 개선 프로젝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경계 없이 이웃과 주민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식의 커뮤니티 실험 기획을 제안한다.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토연구원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미래변화를 전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인구’, ‘초고령화’, ‘다문화사회’를 3대 메가트렌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인 2020년에 254만 명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409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대비 거주 외국인의 비율은 2020년 5%에서 2050년에는 9.8%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9).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는 1990년대 말부터 국제결혼과 외국인근로자의 이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게 되었고, 이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비교적 최근해야 주요 정책의제로 등장한 것에 비해 먼저 사회의 관심사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9만 명이다(2015년 말 기준).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성비에서 3.69%로 수치상으로는 그리 높은 비율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 유입 이민자들의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외모와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한 이주민들의 가시성 때문에 더욱 눈에 띄는 현상으로 인식된다(구본규, 2013). 또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이주민의 증가가 점차 더 커질 것이며 그 결과 인구구성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다른 한국사회의 사회·문화변동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사회현상 또한 담론과 정책의 갑작스런 증가로 나타났다(구본규, 2013). 다문화주의¹⁾는 이주와 이주민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으로 등장했고,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주와 관련된 정책, 학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주요 키워드가 되

1) 다문화주의는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의 잠재력과 정당성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 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잡도록 하는 정책목표를 가진다(서기주, 2015).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들이 이주국으로 동화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았던 동화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었다(구본규, 2013).

이주민을 제도화된 방식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들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 4월 정부는 ‘다문화, 다민족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방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재한외국인 처우개선법」(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08년) 등의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시책들이 수립, 시행되면서 각종 지원책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로 다문화정책 추진 10년이 되었다. 그동안의 이주민정책의 실효성과 다문화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자 하는 시도가 언론과 학계 등에서 있었지만, 이주민지원사업의 현장이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희망제작소가 새로운 시민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 이주민들의 현재 모습을 조망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진행했다.

2.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먼저 다문화정책의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오랫동안 이주민지원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내리는 평가와 성과를 중심으로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간의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현장의 요구들, 새롭게 발견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함께 미래사회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앤두탱크’로서 희망제작소가 더 건강한 다문화정책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가져할 자세 등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질문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이주민 인구구성과 현황, 특히 다문화인구 집계방식의 상이함을 살펴본 후, 관련 정책들과 정책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이어 이주민 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전문가

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향후 방향성과 변화지점을 살피고 희망제작소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안을 정리함으로써 마무리한다.

심층인터뷰는 이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질문은 반구조화된 형식²⁾으로 구성되었고,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6년 이후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현황에 대한 점검, 현장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운 점들에 관한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앞으로의 다문화정책과 사업의 방향, 시민사회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에게는 사전에 인터뷰 목적과 대략적인 질문문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들이 추가되었고 이에 대해서도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전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민간 이주민지원단체 또는 지방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지원기관의 전문가들이었다. 관련 정책연구소의 연구자 1인, 민간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청소년 공부방교사 1인, 경기도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통번역사 이주민여성 2인도 포함되었다. 2016년 4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총 10회의 대면인터뷰로 진행되었고, 각 인터뷰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2)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는 정해놓은 질문내용으로 진행하되 인터뷰 참여자의 반응을 통제하지 않고 편안한 상황을 유지하며 질문하는 형태로서, 심층면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 중 하나이다(나미수, 2012).

[표 1-1]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인터뷰 참가자

구분	소속
A	한국건강가족진흥원
B	한국다문화센터
C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D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	파주엑소더스
F	사단법인 푸른사람들
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
I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
J	다문화청소년 공부방

II. 문헌분석: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1. 이주민 인구 구성 및 현황

2. 다문화정책 현황과 점검

II. 문헌분석: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1. 이주민 인구 구성 및 현황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이민자 현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의 자료는 조사목적에 따라 그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 및 북한이탈주민의 포함 여부, 국적 취득 여부 기준이 영향을 미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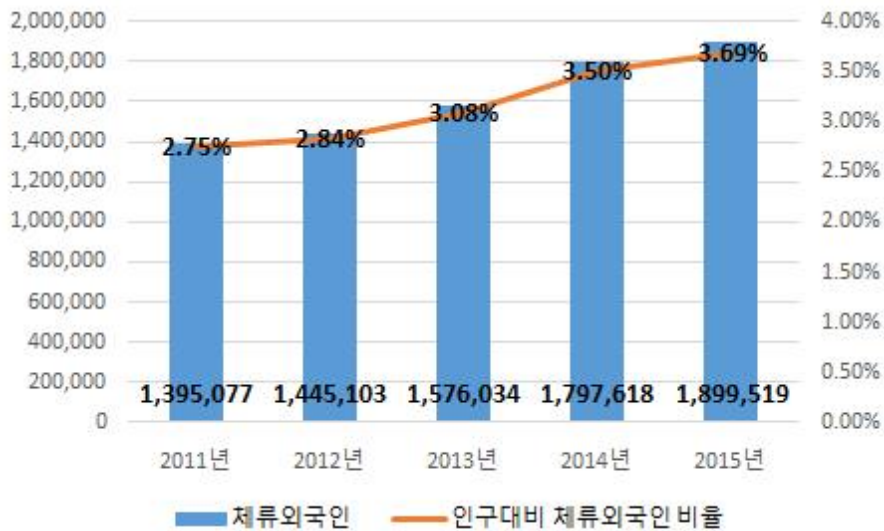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99,519 명으로 2014년 대비 5.7%(101,901 명)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529,338 명)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3.6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36).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구성을 보면 재외동포(F-4)가 328,187 명(17.3%)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H-2) 285,342 명(15.0%), 비전문취업(E-9) 276,042 명(14.5%) 순으로 많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체류외국인은 123,255 명(6.5%), 결혼이민(F-6)은 120,485 명(6.3%)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41).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통계연보는 국적, 체류자격별, 지역별 체류 현황을 담고 있으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발간한다.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통계는 지방자치단체별 거주 외국인주민의 국적, 성, 유형별 현황을 담고 있으며, 한국 국적 취득자 정보와 다문화가족 자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국제이동통계, 외국인, 귀화자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자 정보를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외국인의 취업, 실업 등 경제활동실태를 조사하는 외국인고용조사를 발표한다. 고용노동부의 이주민 관련 통계는 고용허가제 원자료,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 배우자,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이규용 외, 2014:21-23).

[그림 II-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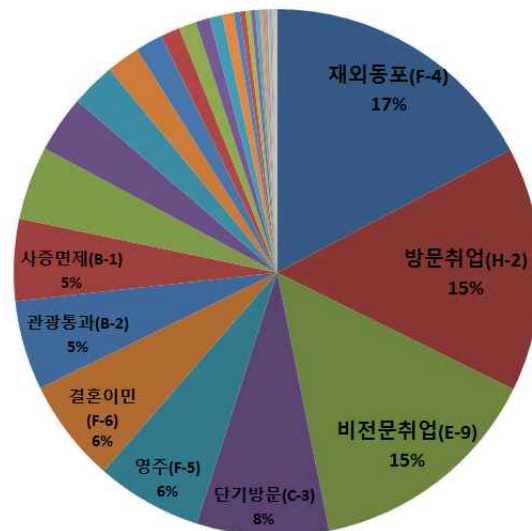
(2015.12.31. 현재. 단위: 명,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그림 II-2]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5.12.31. 현재. 단위: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⁴⁾ 중 가장 큰 집단은 이주노동자이며, 그 다음은 재외동포, 혼인귀화자와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이다.

각 국가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만, UN은 노동 또는 취업을 위해 본국을 떠나 이주국가로 이주한 사람을 이주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05). 여기서는 노동 또는 취업 관련 사증을 갖고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을 이주노동자로 규정한다(황민철, 2016:124).

법무부는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을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2015년 말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총 625,129 명이 었다.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소지자의 수가 약 56만 여명으로 이주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우수인재 유치전략에 따라 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 등 전문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는 48,607 명으로 규모가 작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6:42).

재외동포 집단에는 외국국적동포(F-4), 방문취업(H-2) 소지자가 포함된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고려할 때 방문취업 소지자는 이주노동자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방문취업사증 소지자들은 외국국적의 이주노동자인 비전문취업사증(E-9) 소지자보다는 덜 제한적이지만,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외국국적동포(F-4) 소지자와 비교할 때 제한사항이 많아 이주노동자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 분류할 수 있다(황민철, 2016:127).

4) UN 기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체류는 단기이민, 1년 이상일 경우 장기이민으로 분류된다. 국적 취득 여부, 불법 · 합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체류자는 모두 이민자이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기준 또한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귀화인, 외국인주민자녀로, UN 기준의 이민자와 거의 일치한다.

[표 II -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계		625,129	560,236	64,893
전문인력	소계	48,607	43,316	5,291
	단기취업(C-4)	685	549	136
	교수(E-1)	2,612	2,608	4
	회화(E-2)	16,144	16,088	56
	연구(E-3)	3,145	3,135	10
	기술지도(E-4)	192	190	2
	전문직업(E-5)	606	594	12
	예술흥행(E-6)	4,924	3,192	1,732
	특정활동(E-7)	20,299	16,960	3,339
단순기능 인력	소계	576,522	516,920	59,602
	비전문취업(E-9)	276,042	226,770	49,272
	선원취업(E-10)	15,138	9,898	5,240
	방문취업(H-2)	285,342	280,252	5,09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또는 귀화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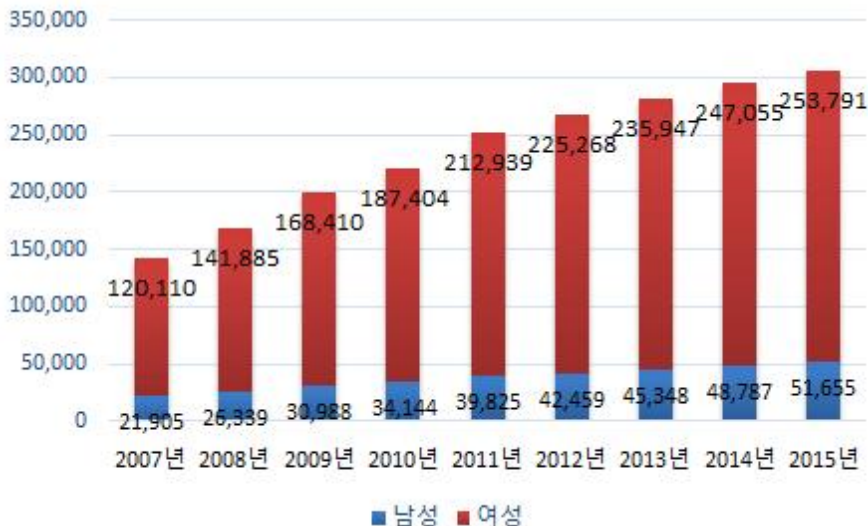
법무부의 체류자격별 현황으로 볼 때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는 2015년 12월 기준 120,485 명이었다.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2007년 결혼중개업관리법 제정, 2014년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시행에 따라 그 증가율이 0.7%로 낮아졌다. 국적·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38.8%로 가장 많고, 베트남 26.9%, 일본 8.5%, 필리핀 7.5%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128,336 명으로 전체의 84.6%에 이른다(법무부 출입국 ㉔외국인정책본부, 2016:48-51).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⁵⁾와 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는 집계로 2015년 7월 기준 82만 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7월 기준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305,446 명으로, 여기에는 결혼이민자 147,382 명과 혼인귀화자 92,316 명이 포함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2011.4.4개정, 20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된다. [그림 II-3]은 이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집계현황을 보여준다.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그림 [II-4]에서 보듯이 2009년 107,689 명에서 2016년 207,693 명으로 크게 늘었다(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2015).

[그림 II-3]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2015.07.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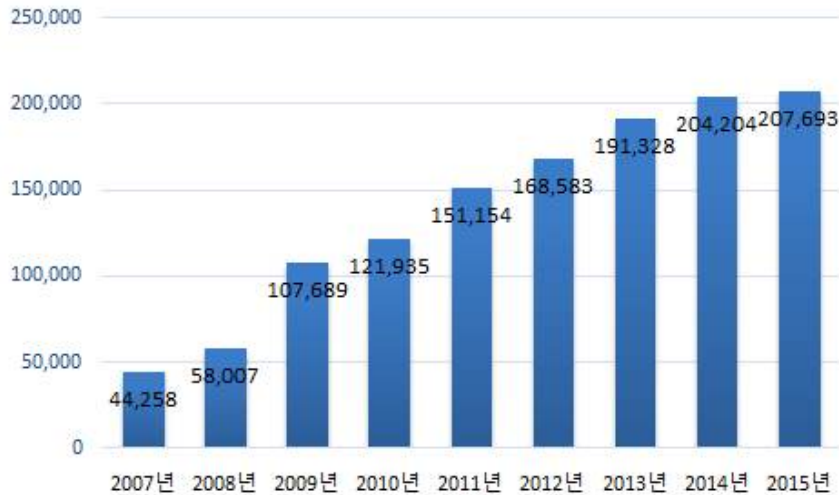


자료: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2015.7);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2015) 참고하여 작성

5)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보면, 결혼이민자에는 체류자격 거주(F-2) 중 '국민의 배우자(F-2-1)', 영주(F-5) 중 '국민의 배우자(F-5-2)', 결혼이민(F-6-1~3)인 자가 포함된다.

[그림 II-4]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만 18세 이하)

(2015.07. 단위: 명)



자료: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2015.7);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2015) 참고하여 작성

* 2009년 다문화가족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해당 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임.

2. 다문화정책 현황과 점검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관련 정책은 국민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력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의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이민자와 국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 5년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인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경(Border)과 이주민(Migrant)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의 개념으로써 국경 및 출입국 관리, 국적부여 정책 및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것을 목표로한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2).

[표 II-2]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적용 법령

유형	관계 법령
외국인의 지위 보장 및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자격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국내체류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포괄 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내취업 이주노동자에 관한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의 해외이주, 외국 거주 재외동포, 국내방문 재외동포에 관한 규정	해외이주법,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결혼이민자 중심의 가족 지원 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불법체류자의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 보장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박복순 외(2013), 16쪽.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및 법령은 1991년에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그 시초이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시행 취지와 달리 외국인력의 편법적 운영, 사기 브로커 등의 송출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자 2007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그 사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법)이 2003년 제정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취지를 가지며, 이주노동자 선정과 알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에 효과적인 인력 유입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한국경제신문, 2016.2.9).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되었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를 부여하고,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건강보험,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등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하였다.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 규정하여, 중국과 러시아 동포를 배제함으로써 이후 논란이 일었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년 3월 개정을 통해 1945년 일제강점기에 타국으로 이주하여 한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한 한국 혈통대상자까지 외국동포의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⁶⁾.

정부는 2002년 취업관리제를 신설해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40세 이상으로 한국에 친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2004년 취업관리제는 이주노동자 대상 정책인 고용허가제로 편입되었고, 2007년 현재의 방문취업(H-2) 자격이 신설되었다. 방문취업 자격은 조선족, 구소련 연방국가들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중소기업이나 3D 업종, 서비스 업종에서만 취업이 허용된다. 2009년 글로벌경제 위기 이후 2010년부터 방문취업 입국자수를 총 303,000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대상 정책은 다른 이민자 정책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다문화정책의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 2006년 4월 범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됐고,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2010년에는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종합정책,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등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적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2007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결혼중개업자만 국제결혼을 주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결혼 부부들의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문제가 부각되면서 2014년에는 결혼이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 이후 2010년 이후부터 국제결혼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문화정책 대상 범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재

6)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되어 중국이나 러시아 동포들은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다.

외동포, 결혼이민자 현황 및 관련 법제를 이민자 유형에 따른 유입과 적응 관련 정책으로 정리하면 [표 I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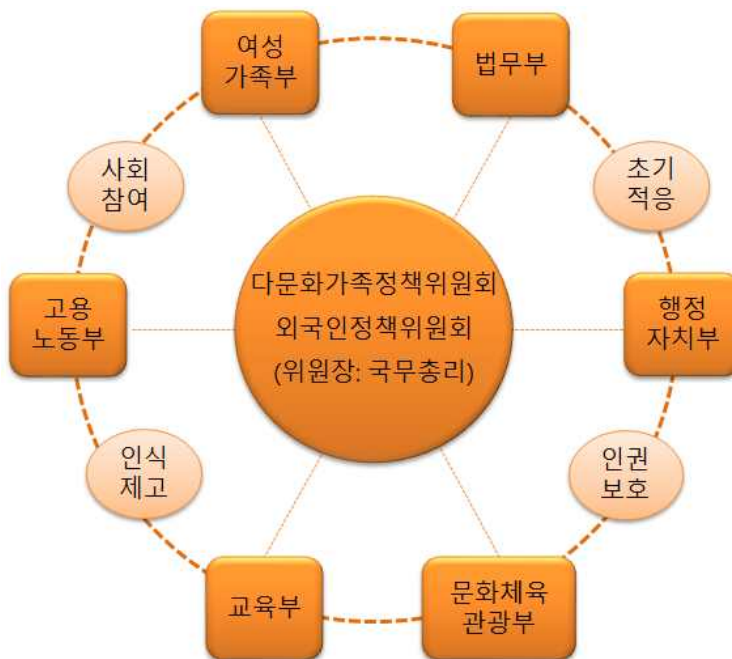
[표 II-3] 이민자 유형별 정책 관련 원칙

원칙	이주노동자		외국국적동포 (F-4)	결혼이민자
	비전문(E-9)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조건	인적자본 (한국어 실력, 교육수준, 직업경력 등)	한국혈통, 단순기능 및 기술	한국혈통	지속적인 결혼생활, 배우자의 자산, 한국어 실력
체류 기간	3년, 최대 4년 10개월	3년, 최대 5년	3년, 최대 4년	영구적인 체류
체류 자격 변경	체류자격 변경 불가	외국국적동포 체류 자격 변경 가능(동일 업종 근속기간 2년 이상, 또는 6개월 근속과 기능사 자격증)/ 영주권 신청 가능(5년 이상 체류, 자산, 경력 심사)	영주권 신청 가능 (한국 2년 이상 체류, 자산 심사)	영주권 신청 가능 (지속적인 결혼생활, 배우자의 자산)
귀화 제도	일반귀화: 5년 이상 한국체류자에게 신청자격 부여. 자귀대상자에게 필기시험, 면접을 통해 귀화 여부 결정			간이귀화: 1년 또는 2 년 한국 체류, 결혼생 활유지 기간 2년에서 3년, 자산 심사 통해 신청자격 부여. 면접 통해 귀화 여부 결정
공공 부조 및 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의료지원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복지서비스(의료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정착 서비스	사회통합,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 조기적응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노동 시장 참여	제한된 업종, 산업에서만 취직 가능. 사업장 변경 불가	제한된 업종, 산업에서만 취직 가능. E-9보다 덜 제한적. 사업장 변경 가능	자유로운 구직 활동 및 취직	

출처: 황민철(2016), 139.

지난 10여 년간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관련 법안과 제도가 수립되어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정책 심의조정기구인 다문화가족정책 ·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정책본부([그림 II-5] 참조)를 두어 국경관리 차원의 소극적인 관점과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인력과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한 상호이해와 공존의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이민정, 2010). 또한 공공영역과 민간차원에서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에서부터 역량강화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들을 전개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프라를 확장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림 II-5] 중앙정부의 이민자 관련 정책 업무 현황



자료: 김복태·이승현(2015), 45쪽 참고하여 재작성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다문화정책은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편중에서 벗어난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거나 수정·보완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⁷⁾. 특히, 이주노동자 가정의 경우는 가족결합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가족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가정은 적극적인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이민경, 2010).

현재까지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이라는 포괄적 복지정책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다문화가족정책이 결국 이주여성이 귀속된 한국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격을 띠게 되는 한계가 있다(이민경, 2010).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관련 정책이 그 이름과 달리 여성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른 이주민 집단을 포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국제결혼가족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가리키는 협소한 의미로만 사용된다(박복순 외, 2013:20).

따라서 이들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의 담지자가 아니라 집단화, 획일화된 시선에서 대상화하고 있고, 이들의 주류화 정책보다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복지서비스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김현미, 2009).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은 각 부처별 중복지원과 가시적인 효과를 겨냥한 단기 이벤트성 지원정책 위주로 시행되어 재원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부처별 정책영역의 확장이나 새로운 정책의 발굴차원에서만 다문화정책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외국인 및 이민자 현황이 부처별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집계되듯이, 담당 및 관련부처들마다 ‘다문화’에 대한 개념 및 내용 범주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정책의 대상과 범주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소외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약화되고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에 대한

7) 여성가족부는 2008년에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결혼이주가정 자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모의 자녀교육 및 양육을 위한 언어서비스지원과 능력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원의 성격이 강한 현재의 정책 방향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이민경, 2010; 박복순 외 2013).

III.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1. 비전과 전략의 부재
2.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3. 시민인식
4. 현장의 요구들

III.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1. 비전과 전략의 부재

우리 사회 다문화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의 진단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집중되었다.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의 종합적 틀 안에서 다문화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통합에 대해 여전히 차별적으로 접근하여 다문화주의적 비전을 담고 있지 못한 점, 그리고 정책과 제도 시행으로 구축된 인프라에 비해 시행프로그램의 내실과 밀착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1) 전략과 비전

우선, 다문화정책을 국가의 발전전략과 연동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다문화정책을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적제도, 국민자격 요건, 귀화의 요건, 이민기준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하고, 국가의 “운영체계를 세팅”하는 수준의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저출산 ·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히 3D 업종에 치중한 노동력 수급에만 초점을 맞춘 듯한 현재의 협소한 이주정책은 유럽이 최근 겪고 있는 이주민 사회통합의 실패 모델을 답습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인권과 차별의 문제만을 강조하는 경우 선주민(한국 국민)과의 균열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요건을 규정하는 헌법, 한국사회 문화제도의 출발점인 교과서, 노동력의 문제와 산업구조까지 관통”하는 전략으로 다문화정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인터뷰참여자 B).

이러한 전략적, 종합적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주민 증가로 인한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해 국가체계의 변화 설계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러한 대처를

위해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까지 제시한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정책논의지형에서 다문화정책이 차지하는 낮은 비중이나 일반 국민의 낮은 다문화수용도를 고려할 때, 국가발전전략 수준에서 이민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단계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 다른 인터뷰참여자(F)는 “아직 다문화는 의제세팅이 완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내용적으로 크게 보면 노무현 정부는 차별시정에, 이후 이명박 정부는 민족주의, 동화정책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정책은 나아진 건 없고, 흐름만 바뀐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아직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주민의 권리부분이나 사회권을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러기 위해선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일깨워줄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다문화주의 통합의 관점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인 다양한 이민자들에게 ‘통합’에 대한 공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을 다문화주의 기본목표라고 할 때(김현미, 2009:1),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자민족중심적이고 성차별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 활동가들과 전문가들도 같은 맥락을 지적했다.

우리 다문화정책이 기본적으로 ‘한국인으로 편입될 이주민들’에게만 지원이 집중돼왔다고 봐요. 가령,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아동,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등록이주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미등록인 아이들의 의료권이냐 교육권이 보장이 안 돼요. 미등록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면, 그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거죠.(인터뷰 참여자 F)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배경(학력, 직업, 출신지역 등)과 문화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관점으로 접근하

지 못하고, 그 여성이 속한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복지서비스에 머무르다 보니 오히려 “다문화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인과 다문화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아서 불편해진”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인터뷰 참여자E). 즉, 다양한 한국인 가정의 하나로 편입시킬 수 있었던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함으로써 하나의 그룹으로 ‘대상화’ 시키고 분리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다문화정책에 대한 거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산하의 다문화정책지원기관에 있는 인터뷰 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다문화가족의 등장은 2000년대 들어서서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급속한 증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가 초기에 이들을 집중지원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혜자 이미지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의 기초가 점차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인터뷰 참여자 A).

또한 다문화정책이 지난 10년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핵심목표를 수정해나가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2007년 80여개로 시작한 이래 현재 217개로 늘어났어요. 웬만한 시군구 단위까지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주로 초기 정착에 포커스를 두고 일종의 동화정책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진행된 건 사실이에요. 언어, 한국음식 배우기, 가정생활 교육, 시부모 대하는 방법 같은 내용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담아서 재편하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준비된 실무자들이나 지역 현안은 부족한 상황 이긴 합니다만, 인프라 구성을 해놓았다는 성과는 있다고 봐요.(인터뷰 참여자A)

실제로 이주자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청소년,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인권지원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양재, 요리 등의 교육시설까지 갖춘 경우들이 많아 이주민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점차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부터 실시된 한국어교육이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등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감을 부여하고 참여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결혼(준비), 임신·출산, 양육, 취업(역량강화)으로 ‘평준화’된 생애 틀을 상정하고 여기서 벗어날 경우, 한국사회 적응에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이주여성의 학력이나 경력, 취업욕구에 따른 다양한 적응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김현미, 2009). 다문화정책의 통합 관점의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2.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담론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음을 인터뷰 참여자들 대부분 지적했다.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하기 전에 위로부터 정책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내용이 관리와 통제 또는 지원 일변도의 성격을 띠게 되고, 무엇보다 이 의제영역에 대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인터뷰 참여자 C, E, F).

다문화사회와 국제결혼을 주제로 공무원교육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저출산 고령화 분야의 강사더라고요. 국제결혼, 이주자문제를 인구증가대책으로만 본다는 것이 충격이었죠... 지원일변도의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 합의된 담론이 우리 안에 없었다고 봐요. 몇몇 사람들이 포럼, 심포지엄에서 만나서 주장하고 흠어지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정도였어요.(인터뷰 참여자 F)

2006년 정책수립 이후 완만하게 진행되어왔던 다문화정책을 동화주의, 민족주의 정책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문화다양성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공론화된 적이 없었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쪽에서는 민족주의, 동화주의 관점으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어느 국회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나도 김해김씨인데, 이주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불안했죠.(인터뷰 참여자 E)

2000년대 후반 문체부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현장에서도 다문화 대신 문화다양성 이야기를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문체부가] 중앙정부 내에서 위상이 약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봐요.(인터뷰 참여자 F)

다문화 관련 법제의 기조에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부처간 중복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논의체계를 만들고자 시도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인터뷰 참여자 A),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다문화 관련 담론화와 정책논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아예 사라졌다”고 진단했다(인터뷰 참여자 B, E, F). 우리 사회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또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합의해갈 것인지 진지하게 논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문화정책 의제의 확산에 대해서 한 인터뷰 참여자는 “정치적 식견이 높은 사람이 이 문제를 다루어서 의제 확산을 해나가야”한다고 지적했지만, 다문화 정책은 정당이나 정책그룹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인터뷰 참여자 B).

이[다문화정책] 의제는 인기가 없다고나 할까요. 이명박 정부 말기 이민정책 총괄부서가 만들어졌다면 합의와 논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문화다양성, 다문화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추상적 수준에서 다양성존중 그런 데는 동의하지만, 관련 기관 모임에 실제로 가보면, 현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봤던 문제의식이 전혀 안보여요. 예를 들어 다문화행사하면 이주민들이 한복입고 장구치고 대한민국 외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건 다문화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인터뷰 참여자 E)

다문화는 그 가시성과 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정책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제를 둘러싼 각 정당들의 정책지형을 보더라도

도 뚜렷한 차이나 적극적인 전략지점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표 III-1]을 보면, 어느 정당이든지 이주와 다문화정책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희옥, 2015:132).

[표 III-1] 정당 간 외국인 및 이민정책 핵심내용 비교

	19대 총선	18대 대선
새누리당	• 다문화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상담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의 적응 지원 강화
민주당	•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 통번역 서비스 확대, 다문화교육 개발 및 대학생 멘토링 운영 • 이주여성 농어업인 후견이제 실시 • 부처별로 분산된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의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지원 내실화	• 19대 총선 공약과 유사함
새정치연합	• (해당 없음)	• 공공기관 일자리에 다문화가정 여성 등을 우선적 배려, 국가가 취업알선, 창업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과 미등록 이주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 내용 개선 • 다문화헌장 제정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DA)의 실효성 제고

출처: 정희옥(2015), 133 참고하여 수정함

미등록 이주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제시한 새정치연합이 유일하게 포괄적인 거주외국인 또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각 정당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만 국한되어 있다(정희옥, 2015:132). 또한 이주관련 법제의 개선, 다문화와 이주 관련 통합전략 단위의 설립 등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정책적 지원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시민인식

1) 시민인식의 개선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인식개선의 필요성은 크지만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서 사업추진도 쉽지 않다고 했다(인터뷰 참여자 A, C, F, J).

2006년 미식축구선수 ‘하인스 워드’ 방한⁸⁾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확대의 큰 계기가 됐던 거 같습니다. 사실 사업을 실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인식개선사업을 해보면 문제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람들, 가령 남편이나 배우자는 정작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인터뷰 참여자 A)

또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가장 필요하고 기대되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인터뷰 참여자는 이야기했다. 실제로 민간이 주민지원단체의 한 인터뷰참여자(E)는 한국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주민지원단체가 이주민공동체사업을 잘 운영한다 해도 지역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공동체가 되어 폐쇄적으로 유지된다면 궁극적으로 시민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민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나 생각을 바꾸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희 센터가 여기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주말에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이 오고가면 주위 분들이 움찔움찔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어떤 분은 무섭다고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떡도 돌리고, 명절 때 선물도 돌리면서 인사를 다녀

8) 김창곤(2006. 2.14.) “‘하인스 워드’ 열린사회 키워드.” 『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2006. 4. 6.) “〈피부색 채국주의 깨자〉청와대 “多인종 종합대책 2~3주내 발표.”; 쿠키뉴스(2006. 2. 9.) “김영희씨 “한국인들의 차별이 제일 힘들었다”...‘워드 신드롬’을 통해 본 혼혈문제”

요. 행사라도 하게 되면 지역 상권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인터뷰 참여자 E)

시민들의 다문화인식도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다문화에 대한 배척도가 높아져요. 아직도 조선족이나 결혼이주여성을 출신의 도구로만 생각하잖아요...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래 되시면 다문화에 대한 민감도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교육해야하는데, 그런 교육이나 계발에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별로 없죠.(인터뷰 참여자 D)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국가족 유지를 위한 대상으로 보는 도구적 인식이나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에서 왔다는 우월주의적인 인식이 문제라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급여나 처우수준을 낮춰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받아들이는 인식이 문제이며 이 경우 외국인혐오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구로, 금천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일용노동자들이 조선족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단순임금노동시장에서 반발과 반감이 엄청나요. 그들로 인해 단가가 떨어지고 노동취약성이 높아지는 현실을 위협적으로 보는 거죠. 급여나 대우가 낮아지니까 분노의 화살이 이주노동자들에게 향하게 되고... 그게 왜곡되면-남성, 일베 등으로 연결되면-이주민 반감, 여성혐오 같이 나타나요. 심지어 진보적인 사람도 그런 경우 있고요... 우리 사회 [다문화]인식 수준이 워낙 낮으니까요.(인터뷰 참여자 F)

하지만 이러한 시민인식의 현재 수위는 완전히 고착화 되었거나 개선의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진단한다. 한 예로, 낮은 민감도를 높이고 공존의식을 확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물론 적극적인 개선의 요구와 교육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이들 학교에 가면 ‘다문화’ 손들어보라는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거죠. 저희 지역의 한 몽골이주여성의 아이가, ‘엄마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다문화라고 불러’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몽골이주여성]엄마가 아이에게 그랬대요. ‘현지야, 선생님이 다문화 손들라고 하면 손들고, 저 다문화 아니고 현지예요’ 라고 답하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두 번 다

시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걸 듣고 저는 우리 사회가 아주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있는 건 아니구나...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인터뷰 참여자 F)

2) 인식조사 현황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민인식에 대한 포괄적인 현황은 여성가족부가 2011년에 이어 2015년에 발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⁹⁾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으로 나타났다¹⁰⁾. 2011년 말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성인은 51.17점, 청소년은 60.12점에서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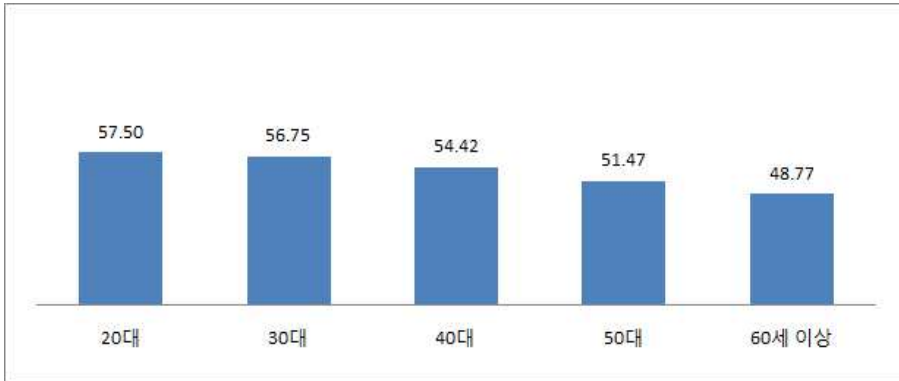
다문화수용성은 집단별로 차이가 확인됐는데, 젊은 연령대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 20대 57.50점, 30대 56.75점, 40대 54.42점, 50대 51.47점, 60대 이상 48.77점이었다. 청소년 평균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67.63으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경향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9) 여성가족부는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처음 실시하였고, 이후 2015년 조사했다.

10) 이 조사는 전국 19세~74세 성인 4,000명과 청소년(122개 중·고교 재학생) 3,640명을 대상으로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등 8개 구성요소별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했다.

11) 단, 척도가 5점 척도에서 6점 척도로 바뀌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림 III -1]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 지수 비교



자료: 여성가족부, 2015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우리사회의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다른 국가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도 있다.¹²⁾ 먼저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한국인이 18개국 중 11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고용문제에 있어서 외국 이주민에 대한 관용성을 묻는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에 한국인은 60.4%가 동의했다. 외국인 고용 관용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14.5%였고, 전통적인 이민 국가인 미국, 호주도 약 50% 선이었다. 외국인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3.5%였고, 한국은 31.8%로 17개국 중 14위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 ‘자신을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함’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인의 55.3%만 그렇다고 응답했다(여성가족부, 2015).

12)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이주민 관련 항목들을 포함시켜 국제비교를 수행했다.(여성가족부, 2015: 185)

[표 III-2] 다문화 관련 지표의 국제 비교

(단위: %)

구 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호주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	60.4	50.5	41.5	14.5	51.0
외국인 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음	31.8	13.7	21.5	3.5	10.6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생각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55.3	69.1	62.3	82.0	79.5

출처: 2015년 성인(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World Value Survey('10□'14)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 또는 이주민과 어떻게, 어떤 공간에서 교류하고 접촉했느냐에 따라 수용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문화교육이나 행사, 이주민 관련 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관련활동 참여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참여횟수에 따라서도 수용성이 달라졌는데, 다문화교육을 한 번 받은 성인은 56.29점, 두 번 받은 경우 55.13점으로 나타났으나,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64.03점으로 크게 높아져 지속적 · 반복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 이수와 활동 참여 비율 자체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인의 경우 다문화교육에 참여해본 비율이 5.5%, 자원봉사 참여는 4.2%, 동호회 참여가 2.7%에 그쳤다. 청소년은 최근 1년간 다문화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25.7%, 다문화활동 참여 비율은 4.6%로 나타났다.

외국인 · 이주민을 친척(55.67점), 친구(58.1점), 직장동료(60.38점)로 둔 경우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았으나, 단순히 이웃(52.41점)하여 사는 경우에는 지수 평균에 미달했다. 직종별로도 차이가 보였는데 외국인 · 이주민 다수 취업업종인 단순노무(51.22점), 농림어업(51.83점), 기능 · 조립(52.96점) 종

사자의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 이주민과의 접촉이나 교류가 많을수록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취업 경쟁 또는 생활공간 공유 등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연령층, 전업주부 등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집단은 이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등 대상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4. 현장의 요구들

1) 역량강화

결혼이주여성 대상사업의 수요를 살펴보면 언어, 취업, 본국에 기여, 한국에서 경제활동 참여 등이다(인터뷰 참여자 H, I). 지역의 기관 및 민간 이주민지원은 이러한 수요들에 맞춰 대부분 설계된다. 한국어교실, 취업교육 및 알선, 통역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구성되는데, 인터뷰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발견하는 고민들은, 많은 경우 이 같은 교육사업의 실효성과 역량강화의 문제였다.

즉,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인가, 그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들이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취업을 원하는 이주여성들 중에서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공단으로 취업을 연결해도 다시 [지원]센터로 돌아오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왜 역량이 강화되지 않는가, 센터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오신지 10년차인 이주여성도 통역서비스를 요청하는데, 물론 급한 사정이니까 통번역을 연결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역서비스 이용에 이주 몇 년 차로 제한을 두어야 하나, 그보다 우리가 지원사업과 교육을 정말 잘 한다면 [이주한 지] 오래된

분들은 점차 안 오고 신규로 오신 분들만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닐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센터가 이분들을 유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인터뷰 참여자 D)

‘전 생애에 걸쳐 똑같은 지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현장의 문제의식은 그렇다면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사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인터뷰 참여자는 모니터링이 좀 더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터뷰 참여자 A).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지점에서 도움받았고, 이후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측정과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원의 결과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성공사례들을 발굴해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과 비교하여 성공의 조건, 요인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상담과 성장

역량강화와 실효성 측정의 문제는 큰 틀에서 상담 지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주 이후 삶의 문제들과 해결, 갈등의 극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이주민 지원 현장에서 상담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임금, 산재, 직장 내 폭행 등의 노동상담과 시부모, 남편, 자녀와의 관계, 생활상의 어려움(일자리, 의료비, 심리적 지지 등)에 관한 다문화가족상담이 주요 상담영역이다. 노동상담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피해와 산업현장의 갈등에 대해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노동부 진정, 노무사 연결, 소통 및 연결 등의 중간역할을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상담의 경우, 가족 내 갈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혼, 시부모와 갈등, 남편과의 소통문제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인터뷰 참여자 E).

사람이 안 길러지는 문제, 이주민들이 자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 커가는 부분은 저는 수십, 수만 가지 교육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보다 결국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문제라고 봐요. 같이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정보를 나누고 생각과 문화를 교류하고... 그런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서 그 안에서 리더가 자연스럽게 양성되어야 해요.(인터뷰 참여자 E)

이주민들은 정착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기에 급급한 채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한국에서 자기를 찾고 자존감을 높이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도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 자조모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성찰과 내적 성장의 장으로 기획, 시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시되기 힘든 사업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부모교육, 부부관계교육, 자아찾기 등등의 교육, 상담프로그램이 깊이 있게 진행되지는 못해요. 언어의 장벽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노출하기 꺼려하는 이주여성들의 성향도 있고요. 그래서 외적인 활동에는 잘 참가하지만, 이런 자조모임이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위향상, 평등의식 같은 프로그램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인터뷰 참여자 C)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현장 상담자들의 교육과 계발, 그리고 꾸준하게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러운 리더의 발굴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5~10년 후 중간리더들이 성장하여 이주여성들이 당사자운동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저희는 한국어교실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하고, 한국어를 모르면 문제가 생겨도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했어요. 2012년도 결혼이주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40~50명이 오고 계세요. 정부에서 하는 한국어교육은 사회통합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는데, 저희는 생활한국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자격시험 프로그램은 안하죠. 오히려 가족같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공부하고 식사하고 생활상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시험 대비 안한다고 다른 데 가셨던 분들도 시험치고 점수 따고나서 다시 오시더라고요.(인터뷰 참여자 E)

3) 다문화가정과 자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은 그들의 자녀문제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즉, 이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과 진학, 취업, 그리고 이후 성인이 되어 지역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점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기존의 정책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발달, 영유아기, 학령기 이전 대상의 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학령기 자녀의 경우는 교육부의 정책과 중복되는 지점이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면이 있다.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으로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¹³⁾ 주로 부모 □자녀 관계 향상,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진로코칭), 위기사례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이탈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여서 다문화가족정책 측면에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인터뷰 참여자 A)

인터뷰 참여자들 거의 모두는 자녀성장의 문제를 가장 큰 관심영역으로 꼽았는데, 주요하게 등장하는 요구지점으로는 우선, 학습과정에서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학습능력면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부모나 교사들이 관심을 충분히 쏟지 않아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공부방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애정을 주니까 자존감이 생기고, 그러다가 점차로 학습의욕이 생기는 게 보이더라고요.(인터뷰 참여자 J)

자녀성장의 또 다른 관심주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이다. 이

13) 2016년 현재 전국 통합서비스 센터 78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소에서 시행 중이라고 한다.

는 훈육법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 한국의 교육환경과의 괴리, 가족 내 관계로 인한 자존감 형성의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사실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관계 맺고 건강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더라고요. 이주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문화적 맥락에서 허용되는 훈육이라든가 자녀방임의 정도가 우리 사회의 현재수준과 달라서,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는 캠페인에 대한 필요성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인터뷰 참여자 C)

다문화엄마들이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아서 니트상태¹⁴⁾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러다보니, 공부방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선주민 아이들과는 다른 게 보여요. 좋게 보면 자유롭게 크는 대로 놔두어 창의적이고 생각이 자유로운 측면이 있지만, 자존감이나 학습에 대한 의욕이 너무 낮아서 안타깝기도 해요.(인터뷰 참여자 E. J)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는 이주여성의 몫으로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녀양육의 문화적 차이나 배우자의 가부장적 방치 등의 요소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교육환경의 접근도나 정보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자녀들이 어떻게 적응, 수용해가는 지에 대한 기본관점과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14) 특별히 하는 것 없이 놀거나 집에만 있는 경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말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는 현대사회의 최근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Ⅳ. 새로운 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1. 변화하는 지형들
2. 지역과 다문화정책
3. 참여와 관계맺기
4.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IV. 새로운 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1. 변화하는 지형들

1) 개인과 집단의 역동성

국내 거주 외국인 180만 명, 다문화가정 85만 명에 이르는 동안 이주민들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가시적으로는 경기도 안산의 원곡동과 같이 다문화특구로 대표되는 신흥 이주민 집중 거주지역,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나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과 같이 전통적인 다문화지역들이 다시 주목을 받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주자집단은 우리 사회와 기존의 시민들과 ‘개별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지난 10년여의 다문화사회 현상이 지난 시기 급증하고 또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이 분명한 이주민집단을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구성원으로 위치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이주민들이 개개의 시민, 지역주민, 이웃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주민을 둘러싼 이 같은 개인과 집단의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암시했다.

다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요즘엔 많이 나오고, 특히 안산과 같은 지역의 경우 친구의 사돈, 옆집 언니 등 몇 다리만 건너면 이주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이주민들이 지역주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에티켓이랄까, 소양이나 생활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다문화행사를 위해 작은 영화관 하나를 대여했는데,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편하고 좋아서 그런지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영화보면서 떠들고,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걸 보면서, 다문화인들이라는 집단의 특수성만 강조하다보니 뭐든지 용인되고 이해되는 것으로 오해될까봐 걱정이 들더라고요.(인터뷰 참여자 C)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문화라고 무조건 지원대상으로 보서는 안돼요. 예를 들어, 향후에는 소득대비 지원의 형태를 소득대비 구분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점차 바뀌어야 한달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등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해야하고요.. 또, 점점 다양해져가는 거주외국인과 국제결혼가정의 형태와 구성에 맞춰 다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인터뷰 참여자 F, G)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중국교포가 이주민의 다수인데요. 센터에 통번역 선생님이 어느 나라 분이 계시냐에 따라 어떤 공동체가 중심으로 활동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중국교포와 조선족 분들은 개신교회 쪽에서 활발하게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라별 공동체나 리더교육도 필요한데, 나라별 공동체는 이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가 좋더라, 어느 직장이 돈을 더 준다더라 같은...) 주고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정서적으로 고향의 음식 먹고, 힘든 것 나누면서 힘을 받고 다시 일주일을 살고 그러는 게 크지요.(인터뷰 참여자 E)

인터뷰 참여자들의 경험과 관찰을 요약하면,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개별 구성원으로서 성숙하는 것과 이주민공동체의 성장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고, 다양해지는 이주민 구성과 단위에 맞게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온오프라인에서 공동체와 모임을 만들고 서로의 필요와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형성하는 등의 그룹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개별적 주체로서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은 각각의 사연과 스토리만큼 다양하다. 이주민지원기관과 단체들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다문화정책이 실질적인 성과가 있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의식의 성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과 집단의 역동성은 이주민들과 우리 사회의 점점의 측면에서만이 아닌 이주민집단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0년간 이주민축제 등의 사업을 이끌어왔던 활동가는 이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한다. 이주민들의 정착이 진행되면서 그들 자체의 생애주기가 변하고 있고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양육, 취업과 재취업, 사회참여 등), 지원단체와의 관계와 참여도에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장의 친구들이 한 3년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애주기의 변화일수도 있고 이주민 세대의 변화일수도 있는데요. 초창기에 충성스러운 이주민 친구들 덕분에 현장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이주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에 지지 기반이 없던 이들이었기에 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어요. 특히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였는데, 이주여성들은 그렇게 가족단위로 결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또 이미 앞선 이주민들이 있고, 자신들의 커뮤니티도 있고요.(인터뷰 참여자 F)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정착한 지 10여 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주민들이 새로운 생애주기에 진입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시기가 올 것은 예상된 지점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왔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70년대 그랬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 이주를 했던, 답답한 상황과 자신의 사회를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민을 선택하곤 했잖아요. 그런 것 처럼요. 초창기 1세대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출신국에 대한 향수가 낮은 편이었는데, 지금 2세대들은 또 달라요. 먹고사는 문제나 아이들 교육문제도 고민하지만, 어찌 보면 본인의 만족이나 성장에도 관심이 많아요. 출신국의 문화도 바뀌어가고, 그런 영향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여전히 경제수준은 낮지만 가족을 무한책임 지고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본인도 어느 정도 챙기고 즐기고 하는 면이 생기는 거죠.(인터뷰 참여자 F)

현장의 활동가들이 느끼는 부분은 현장의 준비에 비해 변화가 빨리 왔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이 이러한 변화를 응축적으로 또 다소 왜곡되어 나타나도록 가속화시킨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국 이민 1세대가 30년~40년을 거치면서 2세대, 3세대에 걸쳐 얻었던 지원과 역량을 우리 사회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은 10년 만에 경험하게 되었다고 비유했다.

커뮤니티 기반으로 10년째 이주민축제를 운영해왔는데 내년에는 못할 것 같은 걱정이 있어요... 저희보다 늦게 축제를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과 협업 차원에서 만났더니, 축제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에게 비용을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을 그 때야 알았던 거죠. 저희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충성도 높은 이주민 구성원들이 그제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이주민들이 저기는 돈 주는데 왜 안주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자기들도 힘들다고요. 글로벌축제니 다문화축제 같은 데서 국가부스 만드는데 춤추고 음식 만드는 이주민들 섭외비 주고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한 축제의 공간을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에 자기 문화 알려서 문화다양성 확장하는데 기여했어야 하는 지점을 돈을 지불하니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인터뷰 참여자 F)

2) 성장하는 다문화청소년

이주현상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잠재적 시민주체로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¹⁵⁾ 가장 주목받아야 할 정책대상일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응과 정체성, 사회적자본과 관계망 형성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조율하고, 관련 부처간 협의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연구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긍정적인 변화 양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다소 증가하고, 부모의 방임적 태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교우관계 수준이 향상하고 집단괴롭힘에 의한 피해경험이 감소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해서 성취동기가 다소 증가했다. 정체성 요인 중 다문화수용성도 증가추세를 보였다.¹⁶⁾ 그러나 우울감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양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수업 중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거나 숙제나 과제를 하기 어렵다는 반응 높아지고, 공부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반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학업성취에 있어 전반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 또한 가족의 지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긍정적 심리요인이 다소 감소하고,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자신을 한국인이라 생각하는 비율,

15) 다문화가족 자녀의 숫자는 2015년 기준 20만8천 명으로 집계된다. 연령별로는 만 6세 이하가 11만7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5년 7월, 안전행정부).

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2015.

이중문화 수용태도,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도 다소 감소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특히,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도 다소 감소한 것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자본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전문가와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단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사춘기 시기와 맞물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강도가 증폭될 수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교사와의 관계와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학습활동,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지지와 성취동기 등은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가지는 다문화적 가치와 사회통합의 관점을 교육하는 일차적인 장으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참여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상황은 학교가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현재 중등 이상의 다문화청소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인터뷰 참여자 E)

학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할 때 선생님들의 대처방안이 제각각인 거 같아요. 상담이 진행되고 담임선생님도 관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정보나 대처방법이 천차만별이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아요(인터뷰 참여자 J)

종단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문화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제한이라는 요인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충분한 심리, 정서 및 학습을 위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측면이 학업성취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언어교육의 보다 면밀한 내용설계를 지적한다(인터뷰 참여자 A, G). 가령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되 학

교박(예들 들어 방과후수업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주민지원기관의 한국어교실 등) 한국어교육의 범위와 역할을 설정하여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등 및 고등과정 이후 진로교육, 이후 취업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한국어 교육체계 마련도 시급한 정책대안으로 본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만을 별도지원하는 형식보다는 통합적 교육형식을 지향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집단화 · 분리화는 의도하지 않는 반다문화주의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미 강조했었다. 또한, 일반학생들의 경우도 다문화학생들과의 접촉 기회가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볼 때도, 통합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설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 다문화이해교육은 지역사회, 학부모, 시민사회 차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강화되어야 한다.

2. 지역과 다문화정책

지역과 지방정부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 그리고 선주민들과 노동, 거주, 생활 등을 매개로 만나는 다문화공간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다문화공간의 일차적 장으로 또 정책의 수행단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민간이주민지원단체와 협업, 지원, 조정 관계에 있는 파트너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 장을 형성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들의 관계는 이주민의 밀집도와 비율, 민간단체의 활동 정도, 지자체의 적극성 등에 따라 갈등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중반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주민을 지원하면서 수면 위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안산시 원곡동은 민간지원단체와 지자체들이 이주민 대상의 상담, 교육프로그램, 축제 등의 행사 지원사업의 영역에서 지원의 ‘정당성’이라는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¹⁷⁾이 촉발됐고, 다문화특구 지정을 둘러싸고 지역민들의 입장까지

17) 서민우(2012)의 연구는 민간지원단체는 이주민의 인권을, 지방정부는 이주민의 정착을 목표로 하여 이주민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갈등 구조에서 양 진영 모두 지원의 정당성이라는 새

더해져 더욱 심화되기도 했다(서민우, 2012).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민원 해결의 측면이 강했다.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데,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사업의 개발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사업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필수적이다.

제가 일했던 서울의 관악구와 전남의 농촌지역을 보면 이주여성의 구성이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 모든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관악구는 지역 특성상 엘리트 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이주여성간 소득과 교육수준격차가 컸고요. 농촌지역은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 모두 부족합니다. 이주여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중교통도 흔치 않아서 한국어수업 2시간을 듣기위해 이동하려면 하루가 다가는 지역이었어요.(인터뷰 참여자 D)

중앙정부 정책은 가족 단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통한.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이미 해결된 가정에 대해 접근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다문화가족 자녀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6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에서 이 같은 지역별 특성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인터뷰 참여자 A)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다문화정책과 사업의 매뉴얼을 제작해서 지역이 상황에 맞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보았다(인터뷰 참여자 A, D). 또 지역의 인식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농촌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해요.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때문에 본인들의 욕구와는 달리 이주여성 이 전문인력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주여성들은 심리적 위축감을 갖게 하는

로운 자원을 획득하려고 시도했다고 보았다.

원인이 된다고 봐요. 지역사회에서 인식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예요.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습득은 사실 그 다음 문제라고 봐요.(인터뷰 참여자 D)

한편, 인터뷰 참여자들은 최근 지자체들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지자체들이 다문화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전 정부가 다문화를 시혜의 대상으로 합의를 하게했다면 현 정부는 철저히 무관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여론은 [다문화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요. 지자체장들은 욕먹을까봐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이 펼친 다문화 관련 사업들, 장학금 지원이나 고국 보내주기 같은 이런 사업들이 다 문화가족정책에 대한 반감을 부추긴 면도 있고요. 저는 이런 때야말로 제대로 된 이주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라고 봐요. 다양성,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이 이뤄져야 하는 거죠.(인터뷰 참여자 F)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일변도의 지원정책을 효율화시켜 조정하고, 지역을 기반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주민-선주민 교류지점과 참여의 접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지원의 대상에게는 지자체들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사업과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양한 이주민들이 교류하고 주민들과 공생하는 커뮤니티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여성, 유학생, 비즈니스로 온 외국인... 다 함께 모여 이주민과 이주민,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교차하며 공생하는, 그런 지역의 살가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을 꿈꾼다. 유학생들이 중국어모임을 하면서, 한국엄마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엄마들은 이주여성에게 한국어와 육아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면 함부로 서로를 대하지 못한다.(인터뷰 참여자 F)

3. 참여와 관계맺기

1) 주민참여, 주민자치

다문화정책이 지원과 복지사업 중심에서 참여의 관점으로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주민자치 또는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주민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과도 연관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조모임이나 다문화서포터즈¹⁸⁾와 같은 아직은 느슨한 형식이 대부분이지만 지역 내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매개가 되고 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정보도 많이 얻어요. 제가 결혼이민 선배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일반 이주여성보다 서포터즈분들이 정보도 많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도 하기 때문에 참여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인터뷰 참여자 H)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사회참여에 대한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참여의 단위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6).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를 원하는 주민자치단체 모임으로는 자녀육아와 교육 문제를 주제로 한 모임, 외국인으로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단체, 한국인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 등을 꼽았다. 따라서 지역에서 이주민과 한국인 주민이 따로 모여 각기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기 보다는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는 것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주민자치모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참여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와 자치모임에 대해 이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와 참여유도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통합

18)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자체 사업이다.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문제해결을 도우며 이주여성간의 멘토 활동도 진행한다.

적 주민참여를 시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어능력이다.¹⁹⁾

2) 관계맺기를 통한 성장

다문화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고 궁극적인 역량강화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친목, 동호회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맺기를 시도해야 한다. 가령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참여와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생활적응의 단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리더십교육 등을 통해 동기부여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후 취업이나 창업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조모임 또한 참여와 관계맺기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과 한국주민 여성들이 외국인 · 한국인 주민 여성들이 육아와 자녀교육 등의 문제를 나누는 모임을 활성화하는 고민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자조집단 활성화와 당사자의 중요성에 대해 일본을 여러 차례 가보면서 배웠다. 일본의 한국인 이주여성들이 당사자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도와주려 할 때는 아주 친절했지만, 당사자조직을 만드니까 경계하더라는 것이다. 선주민과 경쟁하는 구도로 되면 경계수위가 높아진다. 현재 한국의 이주여성 자조집단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성과를 내라고 하니까 추제에 나오게 해요. 진정한 자조모임은 아니죠. 형태는 당사자가 나오지만 내용은 자조적이지는 않은 게 현실이라고 봐요.(인터뷰 참여자 F)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멘토링을 좀 더 심화시키는 시도들을 해왔다고 한다.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힘든 부분을 알아주는’ 관계맺기를 발전시키고, 정서적 지지의 폭을 넓혀감으

19)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의 51.8%가 사회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로 한국어 실력의 부족이라고 답했다. 주민자치단체의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65.4%가 한국어 실력의 부족이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 꼽았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6).

로써 자조모임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분들에게도 한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이들이 좀 더 당당한 여성으로 커갔으면 하는 바람을 멘토링으로 시도하게 되었어요. 사춘기자녀들에 대한 이해문제나, 힘든 부분을 알아주고 조언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친정언니, 친구 만들어주기인 거죠. 올해 4년째 지속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의 가족, 한국이모, 베트남언니 같은... 엄마들도 내편이 있다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요.(인터뷰 참여자 E)

3) 사업의 지속성

교육과 멘토링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 모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실효성과 의미를 거두기에는 지원사업으로써 조속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가령 멘토링의 경우에는 주로 6개월이면 끝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데, 한 인터뷰 참여자는 개인적인 관계형성을 하고 실질적인 멘토링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지속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가야되는데. 빨리 성과가 나와야하니까 그렇게 못하죠. 멘토링은 다문화센터에서도 하는데, 6개월이면 끝나요. 기본이 1년~3년 되어야 종결하는 게 멘토링인데도 말이에요. 개인적인 관계 형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인데 6개월만 만나고 다신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인터뷰 참여자 E)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또한 사업의 지속성과 꾸준한 관계맺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말한다. 공부방에 오는 다문화청소년들은 학업성취를 위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공부방 활동이 실제로 학습동기 부여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게 공부방교사인 인터뷰 참여자의 설명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엄마가 이주여성으로 한국어가 약할 때 태어나서 언어배울 때 아빠가 소홀한 경우가 많고 해서, 한국어학습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학습은 잘 안되더라. 그래서 토요일마다 엄마아빠 직장 나가니까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했다. 한 달에 한 두 번 밖에 나가고, 여름캠프 겨울캠프 가고... 점점 아이들이 공부방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먼 데서 오는 애들이 많은데, 3~40분, 1시간씩 버스 타고 와요.(인터뷰 참여자 J)

4.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이주민들이 지역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서 관계와 참여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시민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주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선주민(한국인 주민)의 인식이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여서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외모에서 차이를 보고 다문화청소년에게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너는 왜 이름이 한국이름이니?' 하고 묻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아이들을 무조건 외국인으로 보는 거죠. 아이들은 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다가, 학교 들어가면 친구들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한국인이라고 답하면, 진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요. 아이가 타협을 해서 '엄마는 어디에서 왔고, 아빠는 한국인'이라고 답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면 '나는 외국인이다'라는 정체성으로 굳어지거나. 사춘기가 오면 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들어하게 되요.(인터뷰 참여자 J)

인식개선은 제도화된 사회기관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 등에 다문화인식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구체적인 교육매뉴얼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학교단위에서 다문화교육이 시행

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1년에 한 번 비디오 보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고, 그 내용도 글로벌홍보와 같은 수준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인터뷰참여자 E, J).

보다 섬세하게 생활에서 필요한 다문화와 다양성 존중의 관점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 인권, 양성평등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몇몇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디어의 다문화 이해지침’이라든가 ‘다문화가정 가이드북’ 같은 방식을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주민들에게도 생활교육 또는 기본 시민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문화인들이 개개인으로서 지역주민, 시민,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생활교육(쓰레기, 분리수거부터 마을의제 참여까지)과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소양, 의무 등에 관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주민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지원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착단계와 생애주기의 진전에 따른 참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민으로 성숙해 가도록 해야 한다.

V. 결론

1. 결론

2. 제언

V. 결론

1. 결론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우리 사회 다문화정책은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관리를 위한 법률, 재외동포 취업관리와 방문취업제 도입,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률 등의 제정을 통해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이는 소극적인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노동인력과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이주민정책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프라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미흡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현장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가족결합권이 없는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배제와 동화의 기조로 인해 우리 사회 다문화정책은 자민족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을 내포하며 양성평등, 인권과 같은 다문화주의 관점의 부족을 드러낸다.

여기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미래발전전략과 같은 거시적,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정책의 추진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다문화정책의 비전과 전략, 전문가와 담론이 부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정책은 지난 1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정책 의제에서 낮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과 인식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한국사회 이주민의 역사가 20여 년을 넘어선다고 봤을 때, 정착2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점검을 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보다 이주민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초기정착과 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이후에 이주민들이 한국의 사회경제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시행사업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담과 멘토링, 자조모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지점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지역사회 단위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계맺기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지역과 지자체는 이주민들이 노동과 거주를 통한 삶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다문화공간이 된다. 민간단체들과 지원의 정당성과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는 지자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다문화정책 의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고부관계, 부부관계의 가부장적이고 차별적인 관계 설정과 의식이 주요 이슈였다면, 다문화가정의 자녀 증가로 인한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초점이 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은 학습동기와 성취, 정서적 지지와 부모-자녀관계,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은 일반학생들의 다문화인식 교육과 병행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체성의 혼란기와 맞물려 있는 시기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자본의 확장을 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문화 인식개선은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하나로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대비에 있어서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다문화 관련 시민의식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이주민과 접촉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다문화교육과 봉사의 참여경험이 많을수록 다

문화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교육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교류지점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주민그룹 내의 세대와 문화도 점차 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세대에 비해 본국의 문화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최근 이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사업설계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 이들이 개별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을 집단화해서 구분해왔던 우리 사회의 협소한 시각도 변화해야 한다.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의 정보를 획득하고 연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가정과 학교,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자 주민이다. 이주민들이 새로운 주민으로 어떤 존재감과 역할을 가지고 선주민인 우리와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고 새롭게 접근해야 할 때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다문화의제에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 정부에 들어서 다문화정책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쏟아져 나오던 다문화정책들은 관심 갖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다문화사업들은 중단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문화는 “유행”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우리의 미래사회 핵심의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커갈 것이고,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은 제자리걸음이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라고 있고, 저성장 · 불평등 사회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때야말로 제대로 된 다문화와 이주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주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쟁하고 합의해야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 논쟁이 국가의제 정책 담론의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다문화정책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국가담론은 분명하지만, 구체적 실현은 삶의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

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처럼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이웃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없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다양성의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다문화2세대가 우리 사회에 주인공이 될 때쯤엔 완만해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시민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우리사회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 앤두(Think&Do)탱크’ 희망제작소가 2016년에 사회통합의제 확장을 위해 진행했다. 한국사회가 더 건강한 다문화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정책과 사업성과를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방향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연구는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사업의 본격적인 주제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의제였다. 다만, 과거 사회창안센터²⁰⁾에서 외국인과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인들을 바꾸기 위한 시민제안을 진행했다. 2007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의 규정이 외국인등록증만 부여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는 제안이었고²¹⁾, 2008년에는 이주여성을 위해 아기분유 사용법의 언어를 다양화자는 시민제안이었던²²⁾.

20) 희망제작소가 2006년 창립하면서 만들어진 사회창안센터는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해 기초조사와 시민평가단을 거쳐 개선방법을 찾아 현실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문화 개선, 현금지급기 수수료 신고지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21) <http://www.makehope.org/?p=1453>

22) <http://www.makehope.org/?p=2093>

본 연구는 희망제작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에 좀 더 큰 렌즈를 통해 다문화연구를 진행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로서 다문화, 인구 변화와 노동력 대책이라는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 이주노동자,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대책 없이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조응으로서의 다문화연구인 셈이다. 여기에는 인권과 차별의 문제, 사회통합과 적응, 다양성과 공존의 문제가 국가의 정책과 지자체 사업과 민간지원단체의 활동으로 다루어진다.

시민의 관점에서 사회의 주요한 의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민간연구소로서 희망제작소가 다문화정책 담론의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채 정부주도의 정책화로 추진된 다문화의제에 대해 지역의 실행기관, 민간위탁사업주체, 민간지원단체, 그리고 이주민공동체와 대표가 한데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포럼이나 세미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의제설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테이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진단과 사업방향에 관한 점진, 시행상의 문제나 새롭게 발견되는 요구, 또는 이주와 통합전략의 컨트롤타워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문화정책에 관한 풍부한 종합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목표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기획 □실행할 수 있다. 다문화인식교육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선주민’인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 민감도를 높이고,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학교, 미디어, 기업,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개별 시민들의 차별의식과 편견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우월의식이나 차별,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대해 끊임 없이 경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프로젝트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연결해 다양성 확장의 사례와 그 의미들을 수집하고 콘텐츠화해서 발신함으로써 의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이주여성에게 가장 장벽이 높은 부분 중 하나는 모어보육과 이중언어 교육이 억제되거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모어보육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다.

또 다문화인식교육의 다양한 톨과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의 다문화이해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다문화주의 관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풍부화 한다든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인권, 양성평등 교육매뉴얼 제작을 시도해볼 수 있다. 또한 이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 선주민의 이웃이자 공공성을 담보하는 시민으로서 섬세하고 생활상에서 필요한 태도를 갖추도록 하고, 한국인들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인권, 양성평등을 실천하게 하는 다문화공존 가이드와 같은 형식의 톨을 기획제작하여 확산시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경계 없이 이웃과 주민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식의 커뮤니티 실험을 기획할 수 있다. 일종의 경계 없는 커뮤니티매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을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웃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획은 한 인터뷰 참여자가 “그동안 각각의 개별사업은 다 해봤다. 이제는 지역사회 기반의 커뮤니티 소통의 성과를 [공간적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안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 마디로 이주민, 어린이, 청소년, 주부, 대학생, 노인 등 그 지역의 누가 와도 좋고, 서툰 한국어도 괜찮은 열린 공동체이다.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장’을 만들고, 지역 설문조사도 해서 주민들의 생각이나 동네마다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과 연구를 통해서 희망제작소가 지향하는 다문화와 사회통합

이 단순히 누가 한국인의 자격이 있거나, 어떻게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이주민과 선주민이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 관점이자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국가의 비전임을 밝힐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또한 사회통합의 의미와 실천적 결과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6.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 구본규. 2013.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안산 원곡동 이주민 집주지역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9(2), pp. 5~5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국토연구원. 2009. 「그랜드비전 2050: 우리 국토에 영향을 미칠 미래변화 전망 분석」.
- 김복태, 이승현. 2015.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미. 2009. 결혼이주여서의 사회통합: 가부장제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국회입법조사처
- 나미수. 2012.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 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복순, 박선영, 송효진, 선보영, 강기정. 2013.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 서기주. 2015.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접근방안 연구. 문화교류연구 4(3).
- 여성가족부.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관련 연도별 통계. 다문화정책과.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이규용 외. 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민경. 2010. “다문화 가족정책의 전개: 진보 혹은 후퇴?”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부.
- 정희옥. 2015. “소수자 이슈와 정당정치.” 윤종빈 외, 미래정치연구소 편. 『정

- 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126-14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 행정안전부. 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황민철. 2016.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이주노동자, 외국국적동포,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2016년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행정연구원 공동 하계학술대회 자료집(2016년 7월 15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민정책의 현실진단과 당면과제』, 123-141.
- United Nations. 2005.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and its committee*. Fact Sheet No. 24 (Rev. 1).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 김창곤. 2006. 2.14. “‘하인스 워드’ 열린사회 키워드.” 『디지털타임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9&aid=0000128878>
- 문화일보. 2006. 4. 6. “〈피부색 채국주의 깨자〉청와대 “多인종 종합대책 2~3주내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45369>
-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2015. “(2015년)다문화가족관련 연도별 통계현황.”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5a.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6898
- 쿠키뉴스. 2006. 2. 9. “김영희씨 “한국인들의 차별이 제일 힘들었다”...‘워드 신드롬’을 통해 본 혼혈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0013479>
- 한국경제신문. 2016. 2. 9. “이주노동자, 그들이 없으면 공장도 세상도 불편하다.” http://migrant.hankyung.com/pc_ie/



희망리포트 [2016-07]

다문화정책 연구 보고서: 새로운 모색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발행인 박재승

편 집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디자인 안영삼

발행일 2016년 12월 7일

발행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0

Tel 02.3210.0909 Fax 02.3210.1026`1=

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03008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